

전문대학생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교 양 과 김 양 혁
교 수 이 강 희
사회복지과 전임강사

I. 서 론

1. 연구목적

인간의 태도와 사고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일 것이다. 가치관은 유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교육적 환경을 통해서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적 조건이나 경험이 변함에 따라서 변화를 겪는 종속변수이지만 일단 형성된 다음에는 개인이 행위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된다.

개인의 이상은 개인의 인격이 세우고 사회의 이상은 시대의 정신이 세운다. 여기서의 시대정신이란 어떤 형이상학적 가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시대인의 가치의식의 정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는 그 시대정신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그것은 곧 그 시대의 사회적 이상으로 직결된다. 새로운 시대의 가치의식은 새로운 시대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특히 시대의 방향감각에 예민한 사람들의 가치관일수록 더욱 깊은 고려의 대상이 될 이유를 가졌다. 한국의 장래는 한국의 젊은이의 손에 달려있고, 젊은 세대 가운데서도 특히 그 전위를 맡아볼 대학생들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때도 현재의 한국현실에서 만큼 대학생들의 사고, 태도나 행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적은 없다. 전후세대인 대학생들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식은 놀라울 만큼 변해가고 있고, 전전세대인 기성세대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현실적인 것을 외면한 당위론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생의 숫자는 전체인구의 40분의 1 정도에 그치지만 그들은 전 한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소수 의견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내지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를 통해 전문대학생들의 국가·민족의식, 민주정치의식, 통일의식을 밝혀보고, 둘째, 그들이 어떻게 하여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를 분석하며, 셋째, 개인적 또는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러한

의식이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범위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사회적 이슈인 민족, 민주, 통일이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규정되는 것이 유용하리라는 판단에서 크게 국가·민족의식, 민주정치의식, 통일의식의 세영역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첫째로 국가·민족의식의 영역에서는 민족공동체의 측면, 정권·정부의 측면, 이데올로기의 측면에 관한 의식이 조사 분석되었다.

둘째로 민주정치의식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의 측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 민주적 생활습관 등에 관한 의식이 조사분석되었다.

세째로 통일의식의 영역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의 측면, 통일주체의 측면, 통일방법의 측면에 관한 의식이 조사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들은 다시 조사 대상자의 지역, 성별, 전공, 생활수준 등의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재분석되었고, 변인에 따른 의식의 변화양상과 변인들간의 관계도 필요한 경우에는 더불어 분석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설문지조사법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측정도구, 연구대상표집, 자료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국가·민족의식 영역, 민주정치의식 영역, 통일의식 영역으로 구성했으며, 각 영역은 10~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배경변인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45문항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모든 전문대학 12개교(광주지역 7개교, 전남지역 5개교: 목포3, 순천2)에서 각각 100~150명씩 추출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1205매이다.

세째, 총 1205매의 설문지는 SPSS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통해 분석되었다.

II. 국가·민족의식

모든 인간이 생명의 보존과 영속을 회구하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도 체제의 존속을 추구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 국가, 사회, 정권등은 자기의 체제가 유지되기를 원했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동체에 있어서 체제 존속의 개념이 가장 이론화된 것은 David Easton을 중심으로 한 체제이론(systems theory)이다. 체제이론에 의하면 정치체제란 사회안에서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상호작용이며 구속력을 지닌 결정이 만들어지고 또

시행되는 과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체제는 정치적으로 적절한 구성원의 요구가 구속력을 지닌 결정과 관련되는 행위로 전환되는 일련의 구조와 과정이라는 것이다.¹⁾ 이 전환과정은 어떤 체제유형이 적절한 구성원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즉, 정치체제는 요구와 지지의 투입(inputs)이 다양한 구조와 과정을 거쳐서 산출(outputs)되는 과정, 다시 말해서 권위적 결정과 행위로 변형되는 전환과정이라는 것이다.²⁾

체제이론에 의하면 한 정치체제는 다음의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존속할 수 있다. 하나는 그 구성원이 규칙적인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가능하게 할 때, 즉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할 때이고, 다른 하나는 그 결정이 대부분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이다. 어떤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이 두 필수변인이 충족되지 않을 때 stress가 발생하고 이것이 위험수위(critical range)를 넘을 때 체제의 존속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stress는 두 측면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output stress로서 체제의 구성원이 대부분의 산출(output)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생기며, 또 하나는 input stress로서 체제에 대한 지나친 요구가 있거나 지지(support)가 결여될 때 생긴다.³⁾ 체제의 구체적 대상 가운데는 정치적 공동체(political community), 민족 혹은 국가, 정권, 권위자 등이 있다. 이러한 체제의 대상들에 대한 공동체의식, 즉 우리의식(wefeeling), 지지가 결여될 때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에 착안하여 본장에서는 민족·국가의 차원, 정권·정부의 차원, 이데올로기의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이 어느정도 우리의 현실을 인지, 감정,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석함으로써 국가·민족공동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공동체의식이나 우리의식, 또는 지지등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구체적으로 민족공동체의 측면에서는 한국 민족주의의 목표나 국가의 정통성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체감의 정도나 민족·국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 보았으며, 정권·정부의 측면에서는 현정권의 성격규정 및 신뢰도에 관한 문항과 현정권의 평가에 관한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의 태도를 분석하였고, 끝으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와 좌경화의 문제에 대한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1. 민족공동체의 측면

민족공동체적 인식의 평가를 위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강한 민족적 일체감을 보여 주었으며, 국가나 민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¹⁾ Davi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Y.: John Wiley & Sons, Inc., 1965), p.222.

²⁾ David Easton &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69), p.48.

³⁾ *Ibid.*, p.49.

먼저, 한국 민족주의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서 48.4%의 응답자가 한국 민족주의의 목표를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이다’라고 대답하였으며, 20.3%의 응답자가 ‘외세의 영향을 배제한 자주성의 확립이다’라고 대답하였고, 14.6%의 응답자는 ‘남·북한 통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지역이나 성별 등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 민족주의의 목표가 ‘남·북한 통일’보다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많은 것은 분단상황이 빚어낸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며, 무조건적 통일보다는 통일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조건은 결국 통일을 위한 것이며,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에 대한 욕구는 결국 강한 민족적 결함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이나 북한에 대한 감정적 친밀도와 민족적 일체감을 알기 위한 질문에서도 강하게 보여진다.

표 2-1. 한국민족주의의 목표

(명,%)

자립번영을 위한 국력의 신장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	남북한의 통일	외세의 영향을 배제 한 자주성의 확립	무응답
188	583	176	245	13
15.6	48.4	14.6	20.3	1.1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질문에서 57.4%의 응답자가 우리 국가의 정통성은 남·북한 ‘양쪽 모두에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남한에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5.8%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의견은 배경변수에 따른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같이 국가의 정통성이 남한만에 있지 않고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는 것은 남·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고 그 각각이 나름대로의 국가적 정통성을 보유하고, 이 분단된 국가의 정통성이 합해질 때 통일된 하나의 국가적 또는 민족적 정통성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에 대한 이념적 배척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강한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2. 국가의 정통성

(명,%)

남한에 있다	북한에 있다	양쪽모두있다	양쪽모두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190	60	692	169	73	21
15.8	5.0	57.4	14.0	6.1	1.7

또한 남·북한의 민족적 일체감에 대한 질문중 북한에 대한 민족적 일체감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20.7%)’와 ‘대체로 그렇다(54.1%)’의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정적 의견은 20.5%에 불과했다. 전공별로 보았을 때 공업계에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86.4%) 다른 배경변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북한주민은

우리 국민에 대해 민족적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42.7%의 응답자가 긍정의 태도를 보였고, 33.3%의 응답자가 부정의 태도를 나타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23.6%나 되었다. 지역별로 순천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42.2%) 전공별로는 공업계에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51.4%), 생활수준이 '하'에 속하는 계층에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52.9%). 이상과 같이 북한에 대한 일체감에 있어서는 높은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들이 북한주민의 우리 국민에 대한 일체감에 대해서는 낮은 긍정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응답자 자신들의 북한에 대한 일체감은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으나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없다는 한계성과 북한의 체제가 갖는 경직성에 대한 회의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 주민의 민족적 일체감은 확신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표 2-3. 민족적 일체감

(명,%)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 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모르겠다	무응답
나는 북한에 대해 민족적 일체감을 느낀다.	249 20.7	652 54.1	195 16.2	52 4.3	53 4.4	4 0.3
북한주민은 우리국민에게 민족적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114 9.5	400 33.2	259 21.3	145 12.0	284 23.6	5 0.4

이러한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민족적 일체감의 정도는 운동경기에 있어서의 응원태도를 물어보는 다음의 질문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여진다. 즉,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운동경기에서 어느쪽을 응원하겠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미국의 경기에서는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응답자가 89.0

표 2-4. 운동경기의 응원태도

(명,%)

북	미	무
국	국	응
한	국	답
1,071	71	62
89.0	5.9	5.1
북	소	무
국	련	응
한	국	답
1,095	44	66
90.9	3.7	5.5
북	중	무
국	국	응
한	국	답
1,043	99	60
86.8	8.2	5.0
북	일	무
국	본	응
한	국	답
1,122	21	62
93.1	1.7	5.1

%로 나타났으며, 북한과 소련과의 경기에서는 북한에 90.9%, 북한과 중국의 경기에서는 북한에 86.8%, 북한과 일본의 경기에서는 북한에 93.1%의 응답자가 응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같이 중국이나 소련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북한에 대한 감정적 선호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을 하나의 민족으로 인식하는 민족적 일체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이념을 떠난 하나의 공동체의 식이 적어도 감정적 차원에서는 강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84.9%의 응답자는 조상의 문화유산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69.4%이었고, '오늘날 민족이나

국가를 앞세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응답자중 25.4%만이 가지고 있었으며, 68.2%의 응답자가 오늘날에도 민족이나 국가는 중요시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및 현재의 역사가 주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7.9%에 불과했고 66.4%의 응답자가 우리의 역사는 주체적이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전공별로 공업계에서는 주체적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고(36.9%), 간호계에서는 주체적이지 아니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타났다(80.1%). 이와같이 많은 응답자가 우리의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민족이나 국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좀더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상반된 견해도 표출되었고, 우리의 역사는 비주체적이라는 견해도 강하게 보여졌다.

표 2-5. 국가 및 민족에 대한 인식

(명,%)

	매 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 르 겠 다	무응답
조상이 남긴 문화 유산이 자랑스롭다.	515 42.7	508 42.2	124 10.2	26 2.2	26 2.2	7 0.6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485 40.2	360 29.2	74 6.1	229 19.0	44 3.7	13 1.1
오늘날 민족이나 국가를 앞세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91 7.6	215 17.8	260 21.6	561 46.6	65 5.4	13 1.1
우리의 과거 및 현재의 역사는 주체적이다.	96 8.0	240 19.9	457 37.9	343 28.5	58 4.8	11 0.9

또한, 일제의 잔재청산에 대해서도 95.5%의 응답자가 일제의 잔재가 완전히는 청산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주었다.

표 2-6. 일제의 잔재청산

(명,%)

거의 청산되지 않았다	청산되긴 했으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거의 청산되지 않았다	전적으로 청산되었다	모르겠다	무응답
298 24.7	853 70.8	38 3.2	2 0.2	10 0.8	4 0.3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은 북한에 대해서 감정적 친밀성과 더불어 민족적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주민의 우리 국민에 대한 민족적 일체감에는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이념적 대립집단이거나 위험집단이라는 기존의 배타적 관념에서 벗어나 북한을 우리와 같은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는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응답자들의 의식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목표가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이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나 민족에 대한 의식에 있어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은 국가나 민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좀더 잘사는 나라에서 살

고 싶다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고, 한국의 역사는 비주체적이라는 견해도 보여 주었다.

2. 정권·정부의 측면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의식을 알기 위해 여기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문항, 현정권의 성격규정에 관한 문항, 그리고 현정권의 각 부문에 대한 평가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살펴 보았는데,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며, 현정권의 성격을 군사적이거나 독재적인 것으로 보았고, 정권의 각 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먼저, 정부의 발표나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표 2-7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신문보도에 대해서 71.7%의 응답자가 신뢰도에 있어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TV보도에 대해서는 46.9%의 응답자가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는 25.6%의 응답자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감은 정부 자체에 대한 불신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문보도에 대한 높은 신뢰도는 언론자유화 이후 인쇄매체의 활발한 변화가 보도내용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2-7. 정부와 언론에 대한 신뢰도

(명,%)

	전적으로 믿는다	믿는편이다	믿지않는 편이다	전적으로 믿지않는다	무응답
정부의 발표	7 0.6	301 25.0	758 62.9	135 11.2	4 0.3
T.V 보도	22 1.8	543 45.1	520 43.2	74 6.1	46 3.8
신문 보도	38 3.2	825 68.5	257 21.3	38 3.2	46 3.8

한편 현정권의 성격규정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92.8%가 현정권을 민간정권이 아닌 군사적 성격이 강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86.1%의 응답자는 현정권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권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현정권의 성격에 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전공별로 보면 수·해양계에서 현정권을 민간정권 내지 민간정권적 성격이 강하다(16.8%)와 민주적 정권 내지 민주적 성격이 강하다(30.5%)는 긍정적 시각이 높게 나타났다.

이전 정권에 비교한 현정권의 각 부문에 대한 평가는 표 2-10과 같다. 표에서 보여지듯이, 주어진 각 부문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 특히, 부의 분배나 경제발전, 그리고 지역감정의 부문에는 더욱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고 있었다. 부의 분배에 있어서 응답자의 55.0%가 이전에 비해 '못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더 잘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4%

표 2-8. 현정권의 성격 I (민간정권·군사정권)

(명,%)

민간정권이다	민간·군사혼합형정권이나 민간정권적 성격이 강하다	민간·군사혼합형정권이나 군사정권적 성격이 강하다	군사정권이다	무응답
10 0.8	75 6.2	624 51.8	491 41.0	2 0.2

표 2-9. 현정권의 성격 II (민주정권·독재정권)

(명,%)

민주적정권이다	민주적성격과독재적성격이 혼합 된정권이나민주적성격이 강하다	민주적성격과독재적성격이 혼합 된정권이나독재적성격이 강하다	독재정권이다	무응답
11 0.9	153 12.7	650 54.0	386 32.1	4 0.3

표 2-10. 현정권에 대한 평가

(명,%)

	더잘되고 있다	마찬 가지다	더못되고 있다	잘모 르겠 다	무응답	평 균	표준편차
군의정치적중립	111 9.2	813 67.5	175 14.5	88 7.3	17 1.4	2.171	0.747
경제발전	228 18.9	421 34.9	490 40.7	42 3.5	24 2.0	2.247	0.869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362 30.0	612 50.8	176 14.6	35 2.9	19 1.6	1.872	0.781
부의분배	29 2.4	452 37.5	663 55.0	40 3.3	21 1.7	2.558	0.683
국회의활성화	396 32.5	553 45.9	148 12.3	86 7.1	22 1.8	1.900	0.895
문화발전	353 29.3	583 48.4	147 12.2	96 8.0	26 2.2	1.945	0.904
사법부의독립	136 11.3	700 58.1	168 13.5	182 15.1	23 1.9	2.287	0.921
지역감정	100 8.3	606 50.3	451 37.4	28 2.3	20 1.7	2.305	0.724
인권문제	169 14.0	604 50.1	337 28.0	71 5.9	23 1.9	2.219	0.828
남북한관계 통일문제	206 17.1	708 58.8	221 18.3	48 4.0	22 1.8	2.056	0.764
법과질서유지	140 11.6	609 50.5	395 32.8	34 2.8	27 2.2	2.223	0.773
대외관계	370 30.7	469 38.9	200 16.6	142 11.8	24 2.0	2.055	1.011
공무원들의자세	128 10.6	617 51.2	326 27.1	112 9.3	22 1.8	2.314	0.851

에 불과했다. 그리고 평균도 2.558로서 주어진 각 부문에 대한 평가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경제발전에 대해서 '더 못되고 있다' 라는 응답자는 40.7%였고, '더 잘

되고 있다' 라는 응답자는 18.9%이었다. 또한, 지역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더 잘되고 있다' 라는 응답자는 8.3%에 불과했고, '더 못되고 있다' 는 응답자는 37.4%이었다. 그러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나 국회의 활성화, 그리고 문화발전이나 대외관계의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지고 있는데 이들 네 부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더 못되고 있다' 보다는 '더 잘되고 있다' 에 더 많은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데올로기적 측면

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질문과 좌경화경향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여 각각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현실에서 보여지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테두리안에서 장기적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52.4%의 응답자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결가능하다' 는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응답자는 32.7%이었다. 지역별로 광주에서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결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48.8%로 약간 낮게 나타난 반면, 순천에서는 62.4%로 높게 나타났고, 전공별로 공업계에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결가능하다' 는 응답이 37.9%로 낮게 나타난 반면, '다른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는 의견이 47.6%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약 절반의 응답자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긍정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32.7%에 달하므로 현 사회체제가 갖고 있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현 체제에 대한 기대수준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표 2-11.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해결능력

(명, %)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결가능하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택하든간에 별 차이가 없다.	현재의 이데올로기나 체제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무 응답
631	163	394	16
52.4	13.5	32.7	1.3

한편, 좌경화에 대한 질문에 있어, 대학생이나 일부 사람들의 좌경화 경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7.5%이었고,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7.2%이었다. 지역별로 광주에서는 심각하지 않다(51.6%)고 보는 의견이 심각하다(42.0%)고 보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별로 수·해양계에서 심각하다(71.8%)는 의견이 심각하지 않다(24.4%)는 의견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좌경화의 경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좌경화의 원인을 '민주화의 지연(73.5%)', '반공이념교육의 불충실(15.7%)', '좌경서적(15.5%)', '6.25의 경험

표 2-12. 좌경화 경향의 인지정도 (명,%)

매우 심각	약간 심각	거의 심각하지않음	전혀 심각하지않음	모르겠다	무응답
146 12.1	427 35.4	364 30.2	205 17.0	58 4.8	5 0.4

표 2-13. 좌경화의 원인(복수응답) (명,%)

북한의 선전선동	좌경서적	반공이념교육의 불충실	6.25의 경험이 없어서	민주화의 지연
47 6.4	114 15.5	116 15.7	49 6.6	542 73.5

표 2-14. 좌경화 문제에 대한 대처 (명,%)

강력하게 대처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설득	정당설립인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	모르겠다	무응답
84 7.0	770 63.9	205 17.0	97 8.0	30 2.5	19 1.6

이 없어서 (6.6%)', '북한의 선전선동 (6.4%)의 순서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좌경화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설득·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3.9%로 가장 많았고, '정당설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7.0%이었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좌경화문제에 있어서 좌경화의 정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가장 큰 원인을 민주화의 지연에서 찾고 있었고, 대처방안으로는 화합의 차원에서 설득·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좌경화의 문제는 심각하나 좌경세력을 배척하기 보다는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포용해야 하며, 민주화의 추진만이 심각한 좌경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은 민족공동체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은 국가나 민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정권·정부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문대학생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며 정권의 성격규정이나 평가에 있어서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좌경화는 심각한 측면도 있으나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흡수·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Ⅲ. 민주정치의식

한나라의 정치발전을 논의하거나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가늠하고자 할 경우 많은 조건이나 요소가 거론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들은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⁴⁾ 첫째, 의회제도나 선거제도등 민주적 절차나 제도적 장치가 어느정도 정착되어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둘째, 여러 제도나 장치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정도이다. 셋째, 국민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들 세요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으로 성숙,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일치하지않은 것이 발전도상국들의 현실이다. 우리의 경우에 예외는 아니다.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민주제도가 지속되어 왔고 60년대 이후 어느정도의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루어졌지만 국민의 정치의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쉽게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서 국민의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탐색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흔히 선거의 결과를 놓고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한번의 선거결과로 국민의 정치의식수준을 가린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따라서 정치의식수준이나 민주의식수준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이해를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래의 한국사회의 주역인 대학생들이 어떠한 민주정치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따라 본장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의 민주정치의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치의식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⁵⁾ 그것은 결국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신작용이라는 단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서 정신작용으로서의 의식이란 ① 대상세계나 사물에 대한 단순한 감각의 수준에서부터 이를 지각하는 인지작용이며, ② 개인의 인상과 감정의 종합이고 ③ 대상에 대한 인간의 가치판단과 신념체계를 총칭하는 것⁶⁾이라 할 수 있으며, 본장에서 분석할 정치의식의 대상으로서의 ‘정치적 대상’의 범주는 ‘민주주의’에 한정된다. 대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역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적 측면’,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 ‘민주적 생활습관’이라는 4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시 하위 차원으로서는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적 측면’에서는 인간존엄의 원리, 개인주의의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5 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둘째,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에서는 토론절차의 인정, 관용의 태도, 비판과 타협의 수용,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라는 4 가지 구성요소에 대하

⁴⁾ M. Rejai, *Democracy: The Contemporary Theories*, (N.Y.: Atherton Press, 1967), p.183.

⁵⁾ 정치의식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는 박동서·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1987, 서울대학교 출판부, pp.46~47를 참고.

⁶⁾ T. Natsoulas, "Consciousness", *American Psychologist*, Vol.33 (Oct. 1978), pp.906~914.

여, 세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정당, 언론이라는 5 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네제, ‘민주적 생활습관’에서는 공존의 윤리, 약속준수의 필요성, 서열의 식, 가족주의라는 4 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즉, 본장에서는 민주주의의 각 측면에 대한 각각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이지역 전문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인상과 감정을 가지며 이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있느냐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의 민주정치의식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1. 기본이념의 측면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관점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그에 대한 해석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간존엄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개인주의의 원리 등을 민주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규범적 이념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인간존엄의 원리란 민주주의의 최고이념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존엄 명제로부터 그밖의 다른 이념들이 파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이 가지는 의미는 깊고 다양하나 여기에서는 인간의 지위, 성별, 빈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존재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가치는 가장 중요시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통해 인간존엄의 원리에 대한 신념체계를 밝히고자 했다.

자유는 원리란 적극적으로는 자기를 스스로 지배하는 내면적 자유를 의미하고, 소극적으로는 남으로부터 강제되거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유에 대한 요구는 역사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외부로부터의 압박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그것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자신의 의지에 입각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성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원리에 대한 여기에서는 단순하며 원리적인 언명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문항을 통해 자유의 원리에 대한 수용의 정도를 밝히고자 했다.

평등의 원리에 있어 평등의 내용이나 성격은 역사적으로 변해왔으며, 다소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갖는 특정한 주장으로 세분화되어 왔다. 즉 법앞의 평등, 정치적 평등,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회균등, 경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 등의 개념들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에 관한 의식을 밝혀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광범위한 문항을 통해 평등에 대한 의식을 밝히고자 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념적 원리 중의 하나이다. 물론 주권의 개념이나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많은 논란이 있다. 여기에서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문항을 통해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식을 밝히고자 했다.

개인주의의 원리란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개인의 우월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개인의 인격완성을 중시하고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타인의 같은 자유의 행사와 양립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나 국가는 그 구성원인 개인 상호간의 관계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이때 사회나 국가는 각 개인의 궁극목적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국가와 개인의 대립관계를 상정하여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언명을 통해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한 의식을 밝히고자 했다.

이러한 다섯가지의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표 3-1 과 같았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주의 원리를 제외한 나머지 네 원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가치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하여 평정척도로 전환시켰을 때 인간존엄의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는 1점에 가까운 1.134로 나타나 가장 높은 가치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존엄의 원리를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념이라고 생각할 때 이같은 반응은 어찌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인간존엄의 원리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그 표준편차가 0.528로 나타나 나머지 네 원리보다 높은 합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한 태도

(명,%)

	매 우 찬 성	약 간 찬 성	보 통	약 간 반 대	매 우 반 대	무응답	평 균	표준편차
인간가치의 중요시 (인간존엄의 원리)	1066 88.5	86 7.1	18 1.5	15 1.2	3 0.2	17 1.4	1.134	0.528
국가를 위한 개인의 희생 (개인주의의 원리)	158 13.1	382 31.7	318 26.4	206 17.1	123 10.2	18 1.5	2.751 (3.249)	1.222
인간에 대한 동등한 대접 (평등의 원리)	681 56.5	164 13.6	121 10.0	161 13.4	61 5.1	17 1.4	1.926	1.307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국민주권의 원리)	925 76.8	188 15.6	51 4.2	19 1.6	6 0.5	16 1.3	1.295	0.688
개인의 자유보장 (자유주의 원리)	424 35.2	368 30.5	223 18.5	136 11.3	36 3.0	18 1.5	2.119	1.142

* ()안의 평균은 질문문항에 대한 평균을 ()안의 원리에 대한 평균으로 전환시킨 것임.

인간존엄의 원리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높은 지지와 합의를 보여준 이념적 원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정치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였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 지지도는 1.295이었으며 표준편차는 0.688로 전문대학생들이 이 원리에 상당한 가치부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양대이념으로 일컬어지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대해서는 각각 2.119와 1.926의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각 이념을 중요한 이념적 원리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인간존엄이나 국민주권의 원리보다는 그 합의정도가 낮았다. 즉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대한 표준편차는 1.142와 1.307로 나타나 응답자들의 견해가 위의 두 원리에 비해서는 다소 엇갈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유의 원리보다는 평등의 원리를 좀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무한정한 자유나 절대적인 평등보다는 절제된 자유나 상대적인 평등개념을 염두에 둔 응답자들의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로 제시된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위의 네 원리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즉 국가와 개인을 대립시켜 구성한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질문문항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44.8%, 중립이 26.4%, 그리고 부정하는 비율이 27.3%로 나타나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한 높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었다. 또한 개인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위의 질문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도 2.751에 달하였으며, 표준편차 역시 1.222로 비교적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는 다섯 가지의 이념적 원리중에서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한 동의수준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가와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국가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이지역 전문대학생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생들은 자유, 평등, 인간존엄, 주권재민등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의식속에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을 강조해 온 유교적 전통, 국가 또는 정부를 절대시해 온 국가중심주의 사상의 정치문화로 인해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절차적 측면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를 말할 때 그것은 대부분 원리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중에서도 이념적 원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원리적인 면만 하더라도 이념적인 것과 더불어 그만큼 중요한 절차적 원리가 있다. 이러한 절차적 원리는 민주주의의 목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따라야 할 과정에서 요구되는 원리들로서 이른바 수단가치적 성격의 원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적 원리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민주적 결정과정에서 요청되는 네 가지의 절차적 원리와 행동원리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이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신념체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네 가지의 절차적 규범은 ① 토론절차의 인정, ② 관용의 태도, ③ 비판과 타협의 수용, ④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등이다.

토론절차의 인정이란 하나의 정책이나 결정에서 내용과 목적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소망스럽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주적이 아니라면 결국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거나 어렵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토론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알고자 여기에서는 ‘중간절차야 어떤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언명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토론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언명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의 토론절차에 대한 의식을 밝히고자 하였다.

관용이란 광의로는 자기와는 다른 남의 이질성을 용인하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타인과의 공존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능동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

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와 같이 서열의 엄격성이 강조되는 문화권에서는 경쟁이나 갈등을 무시하고 호도하기 쉬우며, 다양한 의견의 표출보다는 확일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성향 때문이다. 관용의 태도에 대한 분석은 ‘경쟁을 인정하는 태도’와 ‘견해의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경쟁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는 것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라는 문항과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알기 위하여 ‘나라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의 관용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민주적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비판과 타협의 수용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남의 합리적인 비판마저도 수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건설적인 비판을 삼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타협과 비판의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여기에서는 우선 ‘비판에 대한 적극성이나 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남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쉬우므로 되도록 참는 것이 좋다’는 것과 ‘타협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대방에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응답자들의 태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통합하여 감정적인 합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견해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가 중요한 민주적 절차의 한 원리로서 요청된다. 다수결의 원리는 다수와 소수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는 가운데 사회적 의지를 창조하는 방안으로 발달한 것이며, 사회의 합리적인 공통의지를 창조하기 위해 사회의 여러 의지를 조화하고 종합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수자에게 다수의 의견을 자유롭게 분석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다수결의 원리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수결의 원리’에 관한 질문으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결정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과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질문으로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응답자의 의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표 3-2와 같았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토론절차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즉, 토론절차의 인정에 관한 두 부분인 ‘결정의 사전공개와 토의’와 ‘절차의 중요성’에 관해서 응답자들은 각각 1.451과 1.616의 높은 동의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표준편차 역시 1.008과 1.057로서 높은 합의수준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높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견해의 다양성’을 들 수 있는데 응답자들은 이 부분에 1.736의 동의수준을 보여 주었으며, 표준편차 역시 0.974로 민주적 절차에 관한 문항중 가장 높은 합의수준을 보여 주었다. 또한, ‘건설적 비판’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2.020의 동의수준을 보여 자기의 의견이 정당할 경우 남과 다른

표 3-2. 민주주의 절차적 측면에 대한 태도

(명, %)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절차와 무시와 결과의 우선 (절차의 중요성)	17 1.4	40 3.3	88 7.3	268 22.2	770 63.9	22 1.8	4.384 (1.616)	1.057
결정의 비공개와 독단 (결정의 사전 공개, 토의)	25 2.1	28 2.3	49 4.1	172 14.3	913 75.8	18 1.5	4.549 (1.451)	1.008
경쟁의 회피 (경쟁의 필요성)	38 3.2	174 14.4	217 18.0	512 42.5	248 20.6	16 1.3	3.589 (2.411)	1.137
국가문제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 (견해의 다양성)	592 49.1	354 29.4	169 14.0	45 3.7	21 1.7	24 2.0	1.736 (1.736)	0.974
타인과 다른의견의 주장 자제 (건설적 비판)	44 3.7	89 7.4	122 10.1	465 38.8	468 38.8	15 1.0	3.980 (2.020)	1.146
자신의 소신을 주장 (양보와 타협)	114 9.5	236 19.6	298 24.7	367 30.5	172 14.3	18 1.5	3.160 (2.840)	1.249
다수결정에의 복종 (다수결의 원칙)	318 26.4	409 33.9	211 17.5	202 16.8	48 4.0	17 1.4	2.338 (2.338)	1.188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견해자 제 (소수자의 권리)	54 4.5	112 9.3	203 16.8	407 33.8	408 33.9	21 1.7	3.780 (3.220)	1.230

* ()안의 평균은 질문문항에 대한 평균을 ()안의 원칙에 대한 평균으로 전환시킨 것임.

의견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느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나 소수자의 권리에는 각각 2.338과 2.220의 동의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얻고 있었으며, 표준편차도 1.188과 1.230으로 나타나 견해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인 행태라 할 수 있는 ‘경쟁의 필요성’이나 ‘양보와 타협’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즉, ‘서로 경쟁하는 것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견해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3.1%로서 경쟁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수준은 2.411이었으며, 표준편차도 1.137로 의견이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보와 타협에 대한 동의수준은 제시된 8가지의 절차적 원리중 가장 낮았는데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44.8%로서 ‘양보와 타협’에 대한 동의수준은 2.840이었으며, 표준편차 역시 1.249로 제시된 8가지의 절차적 원리중 가장 낮은 합의수준을 보여 주었다.

결국, 응답자들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나 결정의 사전 공개와 토의, 그리고 견해의 다양성이나 건설적 비판에는 높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절차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나 소수자의 권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태도를 보였으며,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인 행태라 할 수 있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과 수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나 경쟁에 대한 낮은 인식과 수용의 태도는

경쟁을 역기능으로 인식하고 타협을 승복으로 착각하며, 양보에 인색한 채 통합과 획일만을 강조해 온 저간의 우리 정치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8가지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앞에서 살펴본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이념적 원리에 대한 전체 평균은 1.945, 표준편차의 평균은 0.977인데 반하여 절차적 원리에 대한 전체평균은 2.079, 표준편차의 평균은 1.124로 나타나고 있어, 절차적 원리에 대한 동의나 합의의 정도는 이념적 원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등 민주주의의 이념들은 대부분의 전문대학생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고 그 합의의 정도도 높게 나타나지만,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3. 제도적 측면

하나의 이념이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제도가 되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만나게 될 때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규범이 지니는 힘도 갖게 되며,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움직일때 한 사회는 민주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제도가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각 제도들이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그 실재를 알기 위하여는 국민 개개인이 현행 제도의 운용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현행의 제도적 장치들이 본래의 기능이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되어, 민주제도라는 것을 가운데 놓고 정부와 국민 사이의 틈이 벌어진다면 민주적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더 어렵게 됨은 물론 민주주의 자체도 존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여기에서는 여러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중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정당, 언론등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입법부의 평가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성격에 비추어 ‘국회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으며, 사법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법원은 정치적 압력과는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사법부의 고유의 권한인 재판권의 공정성여부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 보았으며,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공무원은 자신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봉사하고 있다’라는 공무원의 공정성과 공복성에 대한 문항 및 ‘국민여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행정의 대응성⁷⁾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각각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분석하

⁷⁾ 행정의 대응성이란 행정이 국민의 요구나 선호를 어느정도 충실히 따르며 만족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며,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행정의 대응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행정의 민주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었다.

한편, 정당에 대한 평가는 정당이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여론을 조직화하고 표출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은 국민여론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라는 문항을 통해 살펴 보았으며, 언론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언론의 기능중 민의대변기능과 정책에 대한 분석·비판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언론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며, 정부정책을 정확히 분석·비판한다' 라는 문항을 구성하여 그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표 3-3과 같았다.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의식과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표 3-3.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태도

(명, %)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무응답	평균	표준편차
국회의 민의반영	66 5.5	62 5.1	380 31.5	371 30.8	304 25.2	22 1.8	3.597	1.182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	25 2.1	31 2.6	174 14.4	392 32.5	562 46.6	21 1.7	4.139	1.078
공무원의 공정성 및 공복성	51 4.2	54 4.5	251 20.8	419 34.8	412 34.2	18 1.5	3.857	1.153
국정에의 국민여론 반영	27 2.2	40 3.3	224 18.6	443 36.8	453 37.6	18 1.5	3.997	1.006
언론의 민의대변과 분석·비판기능	74 6.1	109 9.0	275 22.8	399 33.1	327 27.1	21 1.7	3.608	1.241
정당의 민의수렴	25 2.1	73 6.1	328 27.2	422 35.0	337 28.0	20 1.7	3.758	1.090

먼저 표 3-3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4.7%에 불과하였고,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응답자는 79.1%에 달하였으며, 평균 역시 4.139로 여러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현정부의 평가'에서 '사법부의 독립' 부문에 85.1%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며, 많은 응답자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이나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재판의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노력이 더없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행정부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행정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공정성 및 공복성'과 '행정의 대응성'이라는 두가지 질문사항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공무원의 공정성 및 공복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69.0, 긍정적인 평가가

8.7%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857이었다. 이러한 태도도 앞의 ‘현정부의 평가’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78.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의 대응성에 대해서는 더욱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데, ‘국민여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4.4%가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5.5%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평균은 3.997이었다. 이와 같이 많은 응답자들은 공무원의 공정성과 공복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행정이 국민의 진정한 욕구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입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응답자들은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중에서 가장 약한 부정의 태도를 보여 주었는데, 국회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는 10.6%, 보통이 31.5%, 그리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56.0%이었으며, 평균은 3.597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다른 제도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당히 우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의 다수여당에 의한 국회운영에 비해 여소야대의 국회구성이 좀더 민의를 반영하는 데 유리하다는 응답자들의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약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언론의 민의대변이나 분석·비판기능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들은 15.1%, 보통이 22.8%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는 60.2%이었으며, 평균은 3.608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TV와 신문의 보도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46.9%(TV)와 71.1%(신문)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언론의 민의대변이나 분석·비판기능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언론이 사실보도 보다는 민의의 반영이나 정부정책의 분석·비판에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정당에 대한 전문대학생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정당의 민의수렴기능에 대해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즉 ‘정당은 국민여론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8.2%에 불과하였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63.0%이었으며, 평균은 3.758이었다. 이것은 결국 정당의 기능중의 하나인 민의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민주정치의 발전이 정당정치의 성패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정치발전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나 국회, 또는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론 또한 민의의 반영이나 정부정책의 분석·비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여부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자세나 공정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원리나 절차적 원리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한 신념이나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의식수준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 자체의 민주적이며 원활한 운용에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민주적 생활습관

민주주의의 개념은 협의로 해석하면 특정의 정치형태나 정치제도에 한정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란 국가나 사회생활에의 실천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게 되면, 민주주의란 사변의 작용을 통해 추상적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실천과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개념으로서의 모든 생활에 타당성을 갖게 되는 실천원리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양식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주적 생활습관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의 태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우선 민주적 생활양식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약속준수의 필요성(공존의 원리)’과 ‘공동체의식’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여 질문하였으며, 권위주의적 생활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엄격한 서열의식’과 ‘배타적 가족주의’에 대한 질문문항을 구성하여 의식평가의 척도로 삼았다. 이러한 민주적 생활습관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표 3-4와 같았다.

표 3-4. 민주적 생활습관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무응답	평 균	표준편차
서 열 의 식	47 3.9	290 24.1	299 24.8	466 38.7	93 7.7	10 0.8	3.198	1.062
약 속 의 준 수	475 39.4	448 37.2	176 14.6	89 7.4	8 0.7	9 0.7	1.905	0.958
준법정신부정 (공동체의식)	38 3.2	98 8.1	189 15.7	341 28.3	525 43.6	14 1.2	3.975 (2.025)	1.178
가 족 주 의 I	99 8.2	205 17.0	297 24.6	419 34.8	175 14.5	10 0.8	3.279	1.194
가 족 주 의 II	24 2.0	112 9.3	205 17.0	494 41.0	360 29.9	10 0.8	3.850	1.064

* ()안의 평균은 질문사항에 대한 평균을 공동체의식에 대한 평균을 전환시킨 것임.

먼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서열의식에 대해서 어느정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즉, 서열의식에 대한 태도를 묻는 ‘웃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때는 웃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46.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응답자는 28.0%이었고, 평균 역시 3.198로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서열의식과 같은 가부장적 권위가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생활속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서열의식에 관한 질문문항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응답자는 7.7%에 불과했고 63.5%의 응답자가 ‘보통’이나 ‘약간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데에서 보여진다.

한편, 또 하나의 전통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는 가족주의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비교적 다양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즉, ‘요즘같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다(가족주의 I)’라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는 25.2%, 보통이 24.6%, 그리고 반대하는 응답자는 49.3%이었으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을 때 남에게 다소 피해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가족주의 II)’라는 의견에는 찬성이 11.3%, 보통이 17.0%, 그리고 반대가 70.9%이었으며, 평균은 3.850이었다. 이러한 태도들은 이 지역 전문대학생에게 있어서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족주의란 전통사회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특징이며, 사회가 발전될수록 가족이라는 혈연적 유대감에 기초한 집단보다는 사회공동체적 유대감이 강해지게 된다. 민주주의 사회란 결국 가족중심적 사회는 아니며 사회구성원 모두에 기초하는 사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약화는 민주적 행동양식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내 가족만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응답자가 25.2%에 달하고, 강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응답자가 14.5%에 불과한 것은 사회적 불신감의 증대라는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우리사회에 아직도 가족주의적 전통이 잔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민주시민의 소양인 ‘공존윤리(약속의 준수)’나 ‘공동체의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먼저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은 모두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76.6%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남과 더불어 잘 살겠다고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요령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71.9%의 응답자가 반대의 견해를 표명하였고, 평균도 각각 1.905, 2.025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사회에 예측성과 계속성 또는 정형성을 부여하는 기반이 되며 법이란 사회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공적인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약속이나 법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약속이나 법에 대한 강한 규범성을 보인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살펴볼 때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생활태도에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의식이나 가족주의적 의식이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공존의 윤리와 공동체의식은 비교적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은 전통적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합리성을 추구하는 경향과 더불어 법과 약속에 대한 강한 규범성을 나타내었으며 가족 중심적 사고방식이나 행동에서 벗어나 사회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는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 민주적 행동양식들이 정착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민주정치의식이란 주제하에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적 원리나 절차적 원리, 그리고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나 민주적 생활습관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의식이나 태도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등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의식속에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절차의 중요성이나 견해의 다양성등 민주주의의 절차적 원리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공존의 윤리나 공동체의식등 민주적 생활습관도 강하게 보여졌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와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에 대한 신념이나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의식수준, 또는 민주적 생활습관의 정착이 아니고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 자체의 민주적이며 원활한 운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와 연관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정치현실에 대한 응답자들의 태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은 군부나 재벌이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인 구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것은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강한 불만감과 더불어 학생 및 재야등 비제도권 세력에 대한 강한 긍정적 평가로 표출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정치현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 응답자들은 ‘군부(63.8%)’나 ‘재벌(40.5%)’, 또는 ‘학생(29.0%)’ 집단이 한국의 정치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 성별, 전공별, 그리고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군부나 재벌의 정치

표 3-5.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복수응답)

(명,%)

군 부	재 별	학 생	국회의원	재야세력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종교인
752	477	342	305	238	85	55	35	36
63.8	40.5	29.0	225.9	20.2	7.2	4.7	3.0	3.1

적 영향력의 강화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견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것은 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많은 응답자들이 ‘군부의 정치개입(69.1%)’이나 ‘정치인들의 자질부족(66.1%)’이라고 대답하

표 3-6. 정치발전의 저해 이유(복수응답)

(명,%)

국민의 자치 능력 부족	정치인들의 자질부족	북 한 의 위 협	국 제 적 정 치 상 황	학 생 소 요 로 인 한 사 회 불 안	군 부 의 정 치 개 입
329	791	37	267	65	827
27.5	66.1	3.1	22.3	5.4	69.1

는 것이나, 한국의 민주화를 가장 가로 막는 집단이 ‘군부(45.4%)’나 ‘여당(36.1%)’이

표 3-7. 한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집단

(명,%)

여 당	야 당	군 부	관 료	학 생	언론계	재 별	무응답
435	18	547	36	3	14	103	41
36.1	1.5	45.4	3.0	0.2	1.2	8.5	4.1

며, 한국의 민주화를 가장 가로막는 계층이 '상류층(91.9%)'이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보여진다. 다시 말해, 많은 응답자들은 군부나 재벌이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한국의 민주화나 정치발전에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이나 '여당의 정치활동'도 한국의 민주적 정치발전에 장애요소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표 3-8. 한국의 민주화를 방해하는 계층 (명,%)

상 류 층	중 산 층	노 동 자 층	농 민 층	빈 민 층	무 응 답
1107	25	5	3	23	42
91.9	2.1	0.4	0.2	1.9	3.5

다. 여기에서는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강하게 보여지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공헌도에 있어 여당(1.0%)이나 야당(6.7%) 모두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표 3-5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2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9. 한국의 민주화에 공헌한 집단 (명,%)

여 당	야 당	군 부	관 료	학 생	언 론 계	재 별	종교집단을 포함한 재야	무 응 답
12	81	7	4	895	49	2	99	56
1.0	6.7	0.6	0.3	74.3	4.1	0.2	8.2	4.6

이와는 반대로 학생집단이나 재야세력은 표 3-5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으며(학생 29.0%, 재야세력 20.2%), 정치발전이나 민주화에 대한 기여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재야인사나 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 77.7%의 응답자가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15.0%)', 또는 '어느정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62.7%)'고 대답하였으며, 표 3-9에서 볼 수 있듯이 74.3%의 응답자들이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공헌한 집단으로 학생을 들고 있는 것이다.

표 3-10. 재야세력의 정치활동 평가 (명,%)

한국정치발전에 기여하는바가크다	어느정도 긍정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가능한한억제되어야 한다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무 응 답
181	755	151	92	11	14
15.0	62.7	12.5	7.6	0.9	1.2

또한, 응답자들은 표 3-6에서 보여지듯이 '북한의 위협(1.5%)'이나 '학생요소로 인한 사회불안(2.7%)'이 한국의 정치발전에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의 민주화에 가장 공헌한 계층은 노동자(49.3%)와 중산층(39.6%)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것은 분단상황이나 학생운동, 또는 노동운동이 한국의 정치발전이나 민주화에 중요한 저해요소가 될 수 없으며, 정치적 경직성이나 민주화의 후퇴에 대한 원인을 그것에서 찾아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보인 것이라 할 것이다.

IV. 통 일 의 식

한 민족이 두개의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속에 존재하는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우리민족 전체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질곡이자 우리사회의 여러 모순의 응결점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통일은 이러한 질곡을 타파하기 위한 민족적인 사회운동의 지향점이자 현재의 민족사적 과제로서 위치지워진다. 왜 통일은 필요한가? 이러한 물음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들에게 소박하고 막연한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소박하지도 막연하지도 않은 것이며, 현재의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여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밀히 따져 보아야 할 지극히 당연한 문제이다. 더구나,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동구권의 변화나 세계적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는 요즈음 더욱더 고조되고 있으며, 통일이 한민족 전체의 진정한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민족의 절대절명의 지상과제라는 인식도 더욱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사회주의체제라는 북한을 상대로 하는 우리의 통일문제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우리사회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방법론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일문제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본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태도나 관심의 정도, 통일 주체의 문제와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의 영향력문제, 그리고 통일의 방법에서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의 문제, 통일의 저해요인, 통일의 시기와 방법, 구체적인 통일의 방식과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평가에 대한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의 견해를 조사·분석하였다. 6공화국 이후 대학가에서 부터 가열된 통일논의 속에서 전후세대인 대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시각이 기성의 관점과는 놀랄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의 통일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1. 통일에 대한 관심의 측면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업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주어져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통일에 대한 태도나 관심의 정도를 파악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한 빨리 통일하는 것’(23.8%)보다는 ‘통일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55.2%)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공업계에서 낮게 나타나고 수·해양계에서 높게 나타나 수·해양계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좀더 신중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역별, 성별,

표 4-1. 통일에 대한 태도 (명,%)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남북한 자유왕래만 실현되면 통일이 안되어도 좋다.	현 재 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무응답
287 23.8	665 55.2	181 15.0	22 1.8	25 2.1	25 2.1

표 4-2. 통일에 대한 태도의 전공별 차이 (명,%)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공 업 계	34 33.0	51 49.5
수·해양계	28 21.4	81 61.8

생활수준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현 상태가 좋다는 응답자는 3.9%에 불과해 통일문제에 대한 전문대 학생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는 68.1%의 응답자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서’(37.1%)와 ‘단일민족이기 때문’(31.0%)이라는 견해를 나타내어 민족적 일체감과 국내 현실문제의 타개책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별로 분류해 보면, 남자는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적 일체감에서(단일민족 32.9%,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30.6%) 여자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현실문제에서(단일민족 29.7%,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 42.7%) 좀더 많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19.4%의 응답자들은 통일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 남·북한 사이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표 4-3. 통일의 이유 (명,%)

단일민족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서이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이다.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무응답
373 31.0	447 37.1	234 19.4	110 9.1	5 0.4	36 3.0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기위한 질문에서 주변사람들과 통일문제에 관해 토론하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는 응답자는 29.3%, 통일문제에 관련된 서적이나 논문을 읽어본 응답자는 28.5%에 불과하였으며,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잘 아는 응답자는 15.9%,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잘 아는 응답자는 11.6%에 불과하였다. 이와같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높게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부족하였고, 통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표 4-4.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무응답
나는 주변사람들과 통일문제에 관한 토론이나 대화를 자주 나누어 본적이 있다.	90 7.5	263 21.8	557 46.2	188 15.6	83 6.9	24 2.0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에 관련된 서적이거나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다.	83 6.9	260 21.6	429 35.6	249 20.7	153 12.7	31 2.6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9 3.2	153 12.7	521 43.2	304 25.2	143 11.9	45 3.7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3 2.7	107 8.9	437 36.3	347 28.3	231 19.2	50 4.1

인지의 정도도 대단히 낮았다. 통일은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가치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통일에 관한 깊은 관심과 체계적인 지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이다. 또한, 정부주도의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감과 무관심을 막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통일 주체의 측면

통일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한반도 분단상황의 발생원인이 국제적인 성격의 것이며 현실적으로 분단상황의 극복 역시 국제적 성격을 떨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좀더 큰 실질적인 힘이 우리 내부의 것인가 아니면 외부의 영향력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 많은 응답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69.0%)가 '주변 4강'(28.4%)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통일문제에 있어 주변의 영향력보다는 남·북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힘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현재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강하게 보여졌다.

표 4-5.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실현에 대한 비중 (명,%)

남·북한 당사자	주변 4강	무응답
832 69.0	342 28.4	31 2.6

표 4-6. 현재 주변 강대국이 통일에 미치는 효과 (명,%)

도움이 된다	도움이 안된다	무응답
354 29.4	823 68.3	28 2.3

평가에 비교하여 보면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즉, 통일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⁸⁾ 전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과 안보에 관한 대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1988.1, p.7.

해결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증가하였으며, 외부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영향력 자체도 통일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3. 통일 방법의 측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 남·북한 쌍방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으며, 그 방법에는 평화적이고 도덕적인 방법도 있었고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인 방법도 있었다. 또한 통일은 그 선결문제로서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기반조성도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의 기반조성이나 통일방법에 대한 이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있어 많은 응답자들은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71.1%)이나 ‘현정권의 퇴진’(35.7%)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는데 이것은 현정권의 통일외지에 대한 불신감과 더불어 남북대화의 진행상황에 대한 불만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반공 이데올로기도 극복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히 보이는데(28.1%)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폐쇄성으로 인한 배타성이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보인다. 전공별로 수·해양계에서 ‘김일성부자의 퇴진’(31.3%)이 ‘현정권퇴진’(13.7%)보다 통일을 위해 더 시급히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표 4-7. 통일의 선결문제 (복수응답)

(명,%)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현정권 퇴진	경제체제의 대북우위확보	김일성부자의 퇴진	지속적인 북방정책추진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척결
837 71.1	421 35.7	175 14.9	226 19.2	192 16.3	331 28.1

통일의 저해요인에 있어서 61.3%의 응답자가 ‘위정자들이 통일문제를 집권연장에 이용’(37.2%)하거나 ‘주변강대국의 이해관계’(24.1%)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보였으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2.7%)이라는 응답자는 거의 없었다. 즉, 국민들은 통일을 원하고 있으나 위정자나 주변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일문제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나 통일을 방해하여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가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비교적 약하게 평가된 것(17.4%)은 통일에 있어 이념적인 차이는 어느정도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으로 고무적이라 하

표 4-8. 통일의 저해 이유

(명,%)

남·북한의 이데올로기 차이 때문이다.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위정자들이 통일문제를 집권연장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무응답
210 17.4	291 24.1	448 37.2	182 15.1	32 2.7	42 3.5

겠다. 그리고, 주변 강대국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통일의 방해세력이 남·북한정권이기 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 소련등의 주변국가라는 표 4-9에서도 보여지며,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통일에 있어 주변국가가 갖는 영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정도를 말해준다 하겠다.

표 4-9. 통일의 방해세력 (가장 큰 방해세력부터 1~5)

	미 국	남한정권	북한정권	중·소	일 본
순 위	1	4	5	3	2
중 양 값	1.619	3.269	3.631	3.257	2.828

통일의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67.8%의 응답자가 ‘남·북한이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후’(42.7%)이거나 ‘남·북한이 개방사회로 된 후’(25.1%)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의 시기에 대한 합리성과 온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상당한 응답자(14.4%)가 ‘주한미군 철수이후’라는 견해를 보이는데 이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통일에 있어 어느정도 장애요소가 된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응답자들은 김일성의 사망과 같은 남·북한 권력구조의 변화가 통일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찬성 48.7%, 반대 18.6%).

표 4-10. 통일의 시기

(명,%)

주한미군 철수이후	남한이 자주국방 을 확립한 후	남·북한이 정치적·경 제적 안정을 이룩한 후	남·북한이 개방 사회로 된 후	아무때나	무응답
174 14.4	133 11.0	514 42.7	303 25.1	49 4.1	31 2.6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응답자는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 관계개선에 의한 통일’(77.6%)이라는 남·북한 사이의 신뢰감에 기반을 둔 평화적이고 점진적이며 상호평등한 통일방안을 선호하였으며 어느 일방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힘의 우위에 의한 강압적인 통일이

표 4-11.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방법

(명,%)

남북대화를 통한 상 호관계 개선에 의해 서 되어야 한다.	군사력 강화를 통한 군사우위 확보에 의 해서 되어야 한다.	경제적 발전과 경 제적 우위 확보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국제정치역량의 강화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무응답
935 77.6	20 1.7	172 14.3	47 3.9	31 2.6

나 국제적 정치역량이라는 외교적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통일방법으로서의 높은 선호도와는 달리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의 가능성에는 42.2%의 응답자만이 긍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현실적으로 남북대화에 의한 통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인식을 응답자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민족통일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45.5%의 응답자가 찬성하여 체제나 이념보다는 민족

표 4-12.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가능성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무응답
181 15.0	328 27.2	352 29.2	220 18.3	91 7.6	34 2.7

표 4-13. 이념체제에 관계없는 우선적 민족통일 (명,%)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무응답
304 25.2	245 20.3	245 20.3	260 21.6	125 10.4	26 2.2

통일이 중요하며, 어느 일방의 체제나 이념을 고집하여 통일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통일우선론의 견해가 상당히 보여졌다.

구체적인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1국가 2체제를 거쳐 1국가 1체제로 가는 통일방식(37.3%)과 처음부터 1국가 1체제로 통일하는 방식(49.2%)을 대다수 응답자가 선호하여 통일은 체제의 동일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를 강하게 보였으며, 1국가 2체제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이 제안한 고려민주연방제 통일안에 대해서는 거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40.6%)거나 '잘 모르겠다'(37.0%)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남한이 제안한 남북한 최고당국자 회담에 대해서는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54.4%)나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해서'(38.3%) 꼭 필요하다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표 4-14.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식 (명,%)

① 하나의 국가내에 두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형태	② 하나의 국가내에 하나의 체제로 통일	①의 방식을 거쳐 ②의 방법으로 통일	어떤 방식이든 상관 없다.	무응답
97 8.0	593 49.2	450 37.3	31 2.6	34 2.8

또한, 통일여건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회담은 비정치적인 적십자회담(33.3%)이며 군사회담은 통일여건의 조성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은 전문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표 4-15. 통일여건 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회담 (명,%)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최고당국자회담	국회회담	무응답
176 14.6	401 33.3	46 3.8	322 26.7	210 17.4	49 4.1

러나, 전반적인 통일정책의 비교에 있어서 남한의 통일정책이 북한의 통일정책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8.0%에 불과해 통일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인식시켜 주었다.

표 4-16. 북한에 비교한 남한 통일정책의 합리성

(명,%)

매 우 찬성	약 간 찬성	보 통	약 간 반대	매 우 반대	무 응 답
94	243	531	187	99	51
7.8	20.2	44.1	15.5	8.2	4.2

이상과 같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생들은 민족적 일체감과 현실문제의 타개책으로서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심은 높았으나 구체적인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부족하였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였다. 또한, 통일주체로서 남·북한 당사자의 비중을 인정하면서도 현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감을 표현하였고, 주변국가들의 통일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통일여건 조성에 있어서는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감 회복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통일의 방법이나 시기는 온건하고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것을 선호하는 신중한 태도와 더불어 통일은 체제의 동일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도 매우 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무조건적 통일이라는 통일우선론의 견해도 상당히 보여졌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교에 있어 남한의 통일정책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적어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의 문제는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사회, 경제, 정치, 정신, 문화등 삶의 총체적인 차원이 민족·국가적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는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 차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통일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문제로부터 우리 삶의 전체적 현실의 문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따라서 오늘날 통일의 문제는 국민의 어떤 일부 계층의 관심과 이해의 독점·지배될 문제가 아니고 각계 각층의 국민전체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하며, 정부의 통일정책도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총체적인 성격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국민전체의 통일관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적 합의에 의한 통일관이야말로 통일의 문제를 풀어가는 주도적 노선으로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본 조사는 국민적 합의에 필요한 자료적 성격을 갖는다고도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우리 분단현실을 설명하는 오랜 흑백논리의 이데올로기적 강요에서 벗어나 변증법적 논리에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상황은 정치현실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 때문에 민족적 감정의 생생한 요구를 강제적으로 억압하여 온 과거의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 감정을 발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보다 개방적 체제로의 전환이야말로 앞으로의 통일관 및 통일문제의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알 수가 있었다.

첫째, 국가, 민족의식의 부문에 있어, 전문대학생들은 민족공동체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민족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국가적 정통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그들은 국가나 민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정권·정부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전문대학생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으며, 현정권의 성격 규정에서 현정권을 군사적 성격이나 독재적 성격이 강한 정권으로 보았고, 현정권의 각 부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부의 분배나 경제발전, 혹은 지역감정등의 부문에 있어 그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제해결능력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좌경화는 심각한 측면도 있으나 민주화의 추진과정에서 흡수·수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둘째, 민주정치 의식의 부문에 있어 전문대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의 측면에서 자유, 평등, 인간존엄, 주권재민등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의식속에 내면화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충’을 강조해 온 유교적 전통, 국가 또는 정부를 절대시해 온 국가중심주의 사상의 정치문화로 인해 개인주의의 원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에서 그들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이나 결정의 사전 공개와 토의, 그리고 견해의 다양성이나 건설적 비판에는 높은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적 절차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나 소수자의 권리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태도를 보였으며,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인 행태라 할 수 있는 양보와 타협, 그리고 경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과 수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에서 전문대학생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와 평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부나 국회, 또는 정당이 국민의 여론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언론 또한 민의의 반영이나 정부정책의 분석·비판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이나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공무원의 근무자세나 공정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그리고, 민주적 생활습관의 측면에서 전문대학생들의 생활태도에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의식이나 가족주의적 의식이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는 않으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공존의 윤리와 공동체의식은 비교적 철저히 내면화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의 구체적 정치현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들은 군부나 재벌이 정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인 구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으며, 이것은 제도권 정치인에 대한 강한 불만감과 더불어 학생 및 재야등 비제도권 세력에 대한 강한 긍정적 평가로 표출되었다.

셋째, 통일의식의 부문에 있어 전문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의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높게 가지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부족하였고, 통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인지의 정도도 대단히 낮았다. 그리고 통일주체의 측면에서 그들은 통일문제에 있어 주변의 영향

력보다는 남·북한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힘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현재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정부의 통일의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통일방법의 측면에서 전문대학생들은 통일여건 조성에 있어서는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감 회복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으며, 통일의 방법이나 시기는 온건하고 점진적이며 평화적인 것을 선호하는 신중한 태도와 더불어 통일은 체제의 동일성을 가져와야 한다는 견해도 매우 강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더불어 무조건적 통일이라는 통일우선론의 견해도 상당히 보여졌으며,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교에 있어 남한의 통일정책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적어 현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의식구조상의 제반 특징을 보여주는 의식구조 형성의 배경은 사회정치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의식형성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듯이 해방전후로 부터의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해방과 함께 분단이라는 상황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중첩되어 ‘의식구조의 분단’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남한에서는 반공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권위주의 체제가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4.19혁명을 기점으로 꾸준히 전개되던 민주화운동이 80년대에 들어와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여 국민일반의 정치의식을 급격히 높혀 놓았다.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상 학생운동의 역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이론적·실천적 선도성은 그들의 의식구조 변화를 말하여 준다할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의식구조 형성배경은 본 조사연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시 말하여 조사대상을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가 통계상 크게 유의미한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만 전공분야 및 생활수준의 배경요인이 의식구조 형성에 약간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전공분야에 있어서 수산해양계가 보수적 태도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여 주지만, 이는 학교의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활수준에 있어서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주나 상층에 속하는 응답자의 수가 적어 통계상 큰 의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전문대학생들은 국가·민족의식 부문에서 민족공동체 의식이나 이데올로기적 개방성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보여지지 않았으나 현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민주정치 의식 부문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나 절차적 원리 그리고 민주적 생활방식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민주주의 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어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 제도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운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일의식부문에 있어서는 통일의 당위성은 공감하고 있었으나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의 정도는 낮았으며, 현정부의 통일의지나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조사범위를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의식구조 형성배경의 여러 변인들의 유의미성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후의 동일주제의 연구에서 대상과 지역을 달리할 경우 비교분석의 기초자료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승홍,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한국정치학회보, 제 14 집, 1980.
- , “한국의 민주주의론”, 이극찬 편,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법문사, 1985.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방법론, 서울:박영사, 1985.
- 김동일, 김현희, 국민의식구조연구, 한국사회연구소, 1982.
- 김영국 외, 정치학개론, 서울:박영사, 1986.
- 민준기 외, 한국정치의 민주화, 서울:법문사, 1989.
- 박동서, 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 박용현, 강우철, 이관용, “현대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사상과 윤리, 1980.
- 이극찬 편, 민주주의, 서울:종로서적, 1983.
- 이영호, “한국대학생들의 민족주의관”, 이화여대논집, 제 35 집, 1979.
- 이흥구, “한국정치문화와 정치발전”, 한국정치학회보, 제 11 집, 1977.
- 전용신, “한국대학생의 정치적 태도”, 고려대학교 논문집, 제 15 집.
- 정득규, 김종익, “한국인의 정치의식의 구조적 분석”, 논문집, 제 17 집, 전남대학교, 1971.
-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 서울:법문사, 1987.
-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 ,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삼영사, 1972.
- Bloom, B.S., *Stability and Change in Human Characteristic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4).
- Easton David,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Y.: John Wiley & Sons, Inc., 1965).
- Easton D. & Jack Dennis, *Children in the Political System* (N.Y.: McGraw-Hill Book Company, 1969).
- Ehman, Lee H., “Political Efficacy and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Massialas ed. 1, *Political Youth, Traditional Schoo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2).
- Getzels, J.W. and Jackson, P.W., “The Teacher’s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in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ing*, ed by N.L.Gage (Chicago: Rand McNally & Co., 1963).
- Gillis, J., “Personality Need of Future Teachers.” *Educational Psychology and Measurement*, Vol. 24, 1964.
- James, A.B., *Teaching Strategy for the Social Studies* (Brown and Co., 1977).
- Kluckhohn, F.,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51).
- Natsoulas, T., “Consciousness,” *American Psychologist*, Vol.33 (Oct., 1978).
- Massialas, B.,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 (New York: Addison-Wesley Pub. Co. Inc., 1969).
- Pye, L.W.,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 Build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Press,

1962).

Rejai, M., *Democracy : The Contemporary Theories*, (N.Y. : Atherton Press, 1967).

Rokeach, M., *Belief, Attitudes and Values* (San Francisco : Jossey-Bass, 1968).

**A Study on Consciousness Structure of
Junior College Students in Kwangju, Chonnam.**

Yang-Hyuk Kim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Kang-Hee Lee

Dept. of Social Welfare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junior college students in Kwangju, Chonnam.

1. The main areas of students' consciousness in this study are national identity, democracy, unification.

2. The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are personal and social background.

3. Sub-variables of three main areas are ;

1) national community, government and regime, ideology

2) basic values of democracy, democratic procedure, democratic system, custom of democratic life

3) interest in unification, subject of unification, way of unification.

4. Personal and social backgrounds are region, sex, major part, standard of living etc.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1205 junior college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in Kwangju, Chonnam. And the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the students. The statistical method in this study was multiple analysis by using SPSS.

From this analys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

1. In the area of national identity, students had a positive consciousness to the national community and open ideology, but had a negative consciousness to

the present government.

2. In the area of democracy, students had a positive consciousness especially basic values to democracy, democratic procedures and democratic life, but had a negative consciousness to the application of democratic system.

3. In the area of unification, students agreed with interest of unification, but had a low level of recognition to the way of unification. In addition, students recognized suspiciously present government's will and policy of unification.

<부 록>

전문대학생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광주보건전문대학 학생생활연구소는 학생생활상담 및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대학생들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 가치정향등을 파악, 연구하여 새로운 시대의 사회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수한 학술적인 목적에서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본 연구소의 활동을 후원하여 주시는 뜻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통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절대 비밀이 보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를 돕는다는 뜻으로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 10월 일

광주보건전문대학 학생생활연구소장
교수 김 양 혁

지역번호

--	--	--	--

일련번호

--	--	--	--

※ 응답기재요령

- 여러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질문문항은 특별한 지시내용이 없는 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선택지를 하나만 골라 V표를 하시면 됩니다.

<보기 1>

귀하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경기는 무엇입니까?

- _____ ① 축구
_____ ② 배구
_____ V ③ 농구
_____ ④ 야구

2. 주어진 질문항목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때는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에 보기와 같이 V표를 하시면 됩니다.

<보기 2>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	----------	----	----------	----------

딸 아들 구별없이 하나만 낳는 것이 좋다.

_____	V	_____	_____	_____
-------	---	-------	-------	-------

3. 점선(……) 아래 쪽은 자료처리를 위한 곳이니 기재하지 마십시오.

국가, 민족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 I-1. 귀하는 한국 민족주의의 목표를 무엇으로 인식하십니까?

- _____ ① 자립번영을 위한 국력의 신장이다.
 _____ ② 민족적 일체감과 동질성의 확립이다.
 _____ ③ 남북한의 통일이다.
 _____ ④ 외세의 영향을 배제한 자주성 확립이다.

- I-2. 귀하는 우리 민족사의 흐름에서 볼 때 국가의 정통성이 다음 중 어느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 _____ ① 남한에 있다.
 _____ ② 북한에 있다.
 _____ ③ 양쪽 모두 있다.
 _____ ④ 양쪽 모두 없다.
 _____ ⑤ 모르겠다.

- I-3. 귀하는 다음 국가들이 운동경기를 갖는다면 각각 어느쪽을 응원하시겠습니까?

- 1) _____ 북한 : 미국 _____
 2) _____ 북한 : 소련 _____
 3) _____ 북한 : 중국 _____
 4) _____ 북한 : 일본 _____

- I-4.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일제의 잔재들이 얼마나 청산되었다고 보십니까?

- _____ ① 거의 청산되지 않았다.
 _____ ② 청산되긴 했으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 _____ ③ 거의 청산되었다.
- _____ ④ 전적으로 청산되었다.
- _____ ⑤ 모르겠다.

I-5. 귀하는 정부의 발표를 얼마나 믿으십니까?

- _____ ① 전적으로 믿는다.
- _____ ② 믿는 편이다.
- _____ ③ 믿지 않는 편이다.
- _____ ④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I-6. 귀하는 우리나라 매스컴의 보도에 대해 얼마나 믿으십니까?

(각각 “보기”에서 고르십시오)

- 1) T.V의 뉴스보도()
- 2) 귀하가 보시는 신문의 보도()

보 기	
① 전적으로 믿는다.	② 믿는 편이다.
③ 믿지 않는 편이다.	④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I-7. 귀하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이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장기적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장점을 기반으로 해결 가능하다.
- _____ ②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체제를 택하던 간에 별 차이가 없다.
- _____ ③ 현재의 이데올로기나 체제로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I-8. 요즘 신문이나 T.V 보도에 따르면 대학생들 포함하여 일부 사람들이 좌경화 되었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좌경화 경향이 본인 스스로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매우 심각하다.
- _____ ② 약간 심각하다.
- _____ ③ 거의 심각하지 않다.
- _____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 _____ ⑤ 모르겠다.

I - 9. (I-8 문항에서 ①②에 응답한 경우만) 그렇다면 좌경화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를 고르십시오)

- _____ ① 북한의 선전선동
 _____ ② 좌경서적
 _____ ③ 반공, 이념교육의 불충실
 _____ ④ 6.25의 경험이 없어서
 _____ ⑤ 민주화의 지연
 _____ ⑥ 심한 빈부차이

I-10. 좌경화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_____ ②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설득 포용해야 한다.
 _____ ③ 정당설립을 인정해야 한다.
 _____ ④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_____ ⑤ 모르겠다.

I-11. 현 정권을 민간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민간정권이다.
 _____ ② 민간, 군사 혼합형 정권이나 민간정권적 성격이 강하다.
 _____ ③ 민간, 군사 혼합형 정권이나 군사정권적 성격이 강하다.
 _____ ④ 군사정권이다.

I-12. 현 정권을 민주적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독재적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민주적 정권이다.
 _____ ② 민주적성격과 독재적성격이 혼합된 정권이나 민주적성격이 강하다.
 _____ ③ 민주적성격과 독재적성격이 혼합된 정권이나 독재적성격이 강하다.
 _____ ④ 독재정권이다.

I-13. 다음 문장을 읽으시고 귀하의 생각을 “보기”에서 골라 답해 주십시오.

- 1) 나는 북한에 대해 민족적 일체감을 느낀다.()
 2)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에 대해 민족적 일체감을 느낄 것이다.()
 3) 조상이 남긴 문화유산이 자랑스럽다.()
 4)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5) 오늘날 민족이나 국가를 앞세우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6) 우리의 과거 및 현재의 역사는 주체적이다.()

보 기

- | | |
|---------------|--------------|
| ① 매우 그렇다. | ② 대체로 그렇다. |
|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⑤ 모르겠다. | |

I-14. 귀하는 우리의 현실 여건에서 볼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5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1부터 5까지의 번호를 써 주십시오.

- () 민주주의의 확립
- () 문민정치의 확립, 군의 정치개입 배제
- () 좌경사상의 확대 봉쇄
- () 남북통일
- () 외세의 영향을 배제한 민족주의의 확립
- () 국민적 총화체제 확립
- ()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신뢰성 회복을 통한)
- () 외채 등 종속적 경제문제
- () 농촌문제
- () 공해,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
- () 역사의식의 결여
- () 민족정신의 단절
- () 빈부격차

I-15. 현 정권은 그 이전 정권에 비하여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기”에서 각각 고르십시오)
- () 군의 정치적 중립
 - ()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 () 국회의 활성화
 - () 사법부의 독립
 - () 인권문제
 - () 법과 질서유지
 - () 공무원들의 자세
 - () 경제발전
 - () 부의 분배

- () 문화발전
 () 지역감정
 () 남북한 관계, 통일문제
 () 대외관계

— 보 기 —

- ① 더 잘되고 있다. ② 마찬가지다.
 ③ 더 못되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민주정치 발전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생각을 지시문의 내용에 따라 답해 주십시오.

II-1. 귀하는 민주주의란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생각나는 대로 적어 주십시오.

II-2.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가치는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국가를 위해서는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정부는 국민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개인의 자유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II-3.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서로 경쟁하는 것은 마찰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남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쉬우므로 참는 것이 좋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 보다는 자신의 소신을 밀고 나가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수가 결정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대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나라 문제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여 토의하는 것보다 한두 사람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중간절차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II-4.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국회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우리나라 법원은 정치적 압력과는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공무원은 자신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게 봉사하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국민여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언론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며 정부정책을 정확히 분석 비판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정당은 국민여론을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II-5.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	----------	----	----------	----------

- 1) 웃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웃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이 좋다. _____
- 2)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은 모두 지켜야 한다. _____
- 3) 요즘같은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내 가족 밖에 없다. _____
- 4)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을 때 남에게 다소 피해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다. _____
- 5)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남과 더불어 잘 살겠다고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요령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_____

II-6. 귀하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고르십시오)

- _____ ① 국민의 자치능력 부족
 _____ ② 정치인들의 자질 부족
 _____ ③ 북한의 위협
 _____ ④ 국제적 정치상황
 _____ ⑤ 학생소요로 인한 사회불안
 _____ ⑥ 군부의 정치개입

II-7. 다음중 어떤 층이 한국정치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고르십시오)

- | | |
|--------------|--------------|
| _____ ① 지식인 | _____ ⑧ 재 별 |
| _____ ② 학 생 | _____ ⑨ 재야세력 |
| _____ ③ 언론인 | _____ ⑩ 노동조합 |
| _____ ④ 법조인 | |
| _____ ⑤ 종교인 | |
| _____ ⑥ 군 부 | |
| _____ ⑦ 국회의원 | |

II-8.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를 민주화 시키는데 가장 공헌한 집단과 계층을 하나씩 골라 주십시오.

- | | |
|------------------------|----------------|
| 1) _____ ① 여 당 | 2) _____ ① 상류층 |
| _____ ② 야 당 | _____ ② 중산층 |
| _____ ③ 군 부 | _____ ③ 노동자 |
| _____ ④ 관 료 (공무원) | _____ ④ 농민층 |
| _____ ⑤ 학 생 | _____ ⑤ 빈민층 |
| _____ ⑥ 언론계 | |
| _____ ⑦ 재 별 | |
| _____ ⑧ 종교인 집단을 포함한 재야 | |

II-9.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가장 가로막는 집단과 계층을 하나씩 골라 주십시오.

- | | |
|-------------------|----------------|
| 1) _____ ① 여 당 | 2) _____ ① 상류층 |
| _____ ② 야 당 | _____ ② 중산층 |
| _____ ③ 군 부 | _____ ③ 노동자층 |
| _____ ④ 관 료 (공무원) | _____ ④ 농민층 |
| _____ ⑤ 학 생 | _____ ⑤ 빈민층 |
| _____ ⑥ 언론계 | |
| _____ ⑦ 재 별 | |

II-10. 귀하는 재야인사나 단체들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 _____ ① 한국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_____ ②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_____ ③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_____ ④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
 _____ ⑤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 보고자 합니다. 귀하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III-1. 귀하는 통일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어떠한 댓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
-

- _____ ②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_____ ③ 남북간에 자유왕래만 실현되면 통일이 안되어도 좋다.
 _____ ④ 현재대호가 좋다.
 _____ 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 III-2.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단일민족이기 때문이다.
 _____ ②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해서이다.
 _____ ③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이다.
 _____ ④ 국제사회에서 민족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_____ ⑤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 III-3.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실현의 실마리를 푸는데 다음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남북한 당사자 _____ ② 주변 4강
- III-4. 귀하는 현재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 III-5. 통일이 민족적 지상과제라면 통일의 방법은 다음 어느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남북대화를 통한 상호관계 개선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_____ ② 군사력 강화를 통한 군사 우위 확보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_____ ③ 정치적 발전과 경제적 우위 확보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_____ ④ 국제정치 역량의 강화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
- III-6. 남·북한의 통일은 다음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주한미군 철수 이후
 _____ ② 남한이 자주국방을 확립한 후
 _____ ③ 남·북한이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룩한 후
 _____ ④ 남·북한이 개방사회로 된 후
 _____ ⑤ 아무때나
- III-7. 남북한 최고 당국자 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__ ① 자주적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하다.
 _____ ② 남북한의 긴장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

Ⅲ- 8. 통일 여건 조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회담은?

- | | |
|--------------|-------------------|
| _____ ① 경제회담 | _____ ② 적십자회담 |
| _____ ③ 군사회담 | _____ ④ 최고 당국자 회담 |
| _____ ⑤ 국회회담 | |

Ⅲ- 9.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남·북한간의 이데올로기 차이 때문이다.
 _____ ② 주변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_____ ③ 워정자들이 통일문제를 집권연장에 이용하기 때문이다.
 _____ ④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_____ 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Ⅲ-10. 귀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다음중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방해세력부터

1~5 까지 기입해 주십시오.

- () 미국 () 남한정권 () 북한정권
 () 중·소 () 일본

Ⅲ-11.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일은 다음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_____ ①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
 _____ ② 현정권 퇴진
 _____ ③ 경제체제의 대북 우위확보
 _____ ④ 김일성 부자의 퇴진
 _____ ⑤ 지속적 북방정책 추진
 _____ ⑥ 반공 반복 이데올로기의 철회

Ⅲ-12.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식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하나의 국가내에 두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형태
 _____ ② 하나의 국가내에 하나의 체제로 통일
 _____ ③ ①의 방식을 거쳐 ②의 방법으로 통일
 _____ ④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Ⅲ-13. 고려 민주 연방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_____ ②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_____ ③ 잘 모르겠다.

III- 14. 귀하의 입장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약간 찬성	보통	약간 반대	매우 반대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통일문제에 관한 토론이나 대화를 자주 나누어 본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문제에 관련된 서적이거나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남·북대화를 통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이념과 체제에 관계없이 민족통일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남북한 권력구조가 변화되었을 때 (예 : 김일성 사망) 통일의 가능성이 더 높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남북한 통일정책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통일정책이 더 합리적이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마지막으로 설문지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몇가지 사항을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_____ ① 남자

_____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_____ ① 18 ~ 20 세

_____ ② 21 ~ 23 세

_____ ③ 24 ~ 26 세

_____ ④ 27 ~ 29 세

_____ ⑤ 30 세이상

3. 귀하의 학년은?

_____ ① 1 학년

_____ ② 2 학년

_____ ③ 3 학년

4. 귀하의 전공계열은?

_____ ① 공업계

_____ ② 농업계

_____ ③ 수·해양계

_____ ④ 보건계

_____ ⑤ 간호계

_____ ⑥ 가정계

_____ ⑦ 인문사회계

_____ ⑧ 예·체능계

5. 귀하의 군복무 관계는?

- | | |
|---------------|--------------|
| _____ ① 군필 | _____ ② 미필 |
| _____ ③ 징집면제자 | _____ ④ 해당없음 |

6. 귀하의 생활수준은 다음중 어디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객관적으로 답해 주시오)

- | | | |
|-------------|-------------|-------------|
| _____ ① 상상층 | _____ ② 상중층 | _____ ③ 상하층 |
| _____ ④ 중상층 | _____ ⑤ 중중층 | _____ ⑥ 중하층 |
| _____ ⑦ 하상층 | _____ ⑧ 하중층 | _____ ⑨ 하하층 |